

사회적경제 참여가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상일**, 조인영***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참여가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우선, 사회적경제의 개념화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이어 사회적경제와 다양한 유형의 정치참여와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밝히려 하였다. 특히 사회적경제는 투표와 같은 제도적 참여보다는 서명, 시위, 방문,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등 비제도적 참여와 더 밀접하게 연결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사회적경제 참여와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이론적 검토를 근거로 한국의 지역주민 1,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경제 참여와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사이에는 긍정적인 양의 관계가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참여민주주의의 쇠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의 기여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후퇴와 사회적경제를 다루는 기존연구에 이론적, 경험적으로 기여한다.

주제어: 사회적경제, 비제도적 정치참여, 참여민주주의

I. 서론

최근 지역사회에서는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이 확산하고 있다(한상일, 2019). 그중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모두 실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이다(주성수, 2019; 김종걸, 2020). 한국에서도 지난 10년간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했으며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도 증가하였다.¹⁾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산업발전,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등의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4056130).

** 제1저자,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 교수(hans@yonsei.ac.kr).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 조교수(iycho@yonsei.ac.kr).

1) 4대 사회적경제 조직은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구성되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집계에 따르면 2016년 14,417개이던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는 2020년에 24,920개로 증가하였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2). 4대 사회적경제 조직 외에도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신흥 등

역할을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하면서 사회안전망 강화, 공동체 복원과 같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요를 맞추는 역할도 수행한다(Defourny & Develtere, 1999). 사회적경제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구성원 모두에게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거버넌스와 의사결정의 구현에서 찾을 수 있다(정건화, 2012). 특히 OECD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참여를 보장하는 의사결정, 지역과 관련된 사람들이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활동,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이해관계자의 지위 등을 강조한다(OECD, 2022).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경제는 경제적·사회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역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사회적경제는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수립한다. 총회에서 전체 구성원이 함께 의사결정하는 과정, 대의원회에서 조합원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취합하고 대표하는 과정, 소모임에서 분과별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 등은 바람직한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활동이며 정치참여에 필요한 지식과 기법을 학습하는 과정이다(Han et al., 2014). 사회적경제의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소외되는 집단이 없도록 포용적 제도를 설계하고 개방적인 구조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한다면 그들의 정치참여도 활성화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적경제 관련 많은 기존 연구는 주로 사회적경제의 경제적·사회적 성과에 초점을 맞춘 반면, 사회적경제 참여와 정치활동 및 참여의 관계나 그 특징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일찍이 정치참여에 시민으로서의 기술(civic skill)이 중요함은 다양한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Brady et al., 1995). 특히 사회적경제가 공동체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대안의 제시라는 측면에서 참여민주주의의 쇠퇴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요즈음, 실제로 사회적경제가 정치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정치학적으로나 행정학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실무적으로도 사회적경제 활동이 국가중심의 하향식 거버넌스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의사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이는 상당한 현실적, 실천적 의미를 갖는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사회적경제 참여가 비제도적 정치참여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그 이론적 근거를 찾기 위해 사회적경제와 정치참여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들의 관계에 대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개념화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정치적 의미를 설명하고, 사회적경제와 다양한 유형의 정치참여 사이의 관계를 밝힌다. 특히 사회적경제가 증시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메카니즘은 투표나 선거에의 참여로 완성되는 제도적 참여보다는 서명, 시위, 방문,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등 비제도적 참여와 더 밀접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비

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들이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례도 찾을 수 있다.

제도적 참여와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이같은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이론적 검토를 근거로 한국의 지역주민 1,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참여와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 참여의 의미를 고찰하고, 사회적경제 참여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확인하였으며, 사회적경제와 정치참여의 관계를 논의한 문헌들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1,9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사회적경제 참여와 비제도적 정치참여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와 의미를 설명하고 이론적·정책적 의미와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 참여

사회적경제 연구에 많은 영향을 준 Defourny & Develtere(1999, 16)는 사회적경제를 “이윤 창출보다 구성원이나 공공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 의사결정, 수익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을 중시하는 원칙을 따르는 협동조합, 연합회, 상호적 조직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활동”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는 자율성, 민주성, 책임성, 사람 중심(human-centered) 등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며, 특히 공공에 대한 공헌을 강조하면서 공공성을 위한 원칙과 조직구성 등을 설명한다. 공동체를 위한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하며 그 결정은 사람과 노동을 중시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회적경제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개인과 조직, 지역사회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먼저 사회적경제 참여자는 참여의 과정에서 시민성을 발굴하고 자기 삶을 결정하는 주인으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김정원, 2020). 시민성은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구성원으로서의 권리, 지위, 그리고 그에 대한 책무를 포함한다. 시민성의 개념은 공식적으로 정해지기보다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공동체의 구성원이 연대하고 공감할 때 표현되는 가치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에 참여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학습과 공감, 연대의 과정은 공동체 구성원의 덕목을 배양하고 책무를 확인하는 과정이 된다. 사회적경제에서의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역할과 공적 편익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발생한다.

둘째, 개인의 사회적경제 참여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성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에 기여한다. 지역사회의 조직은 지역에서의 상호작용으로 생성되고 제도화되며(정소윤·한상일, 2014),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집단은 연합체를 결성하고, 방향성을 찾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을 거쳐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거듭난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생성된 이후에도 사회적 기업가와의 협력, 사업을 위한 자원공유와 파트너십,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자리매김하게 된다.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적경제 참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성과 제도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제도화과정 이후에도 지역사회의 시급한 문제와 미래의 문제를 조망하여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요소이다.

셋째, 사회적경제 참여는 사회적경제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지역사회에서 그 정체성을 확립하며 발전한다.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문제를 인식하며 그 해결방안을 민주적으로 찾고 실행해 나가는 통로가 바로 사회적경제이다. 지역사회의 구조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구조도 달라지고 상호작용의 양식도 달라지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구성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총회와 소위원회, 대의원회 등을 거치는 민주적인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다. 조합원이나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때 참여적 거버넌스가 형성될 수 있고, 참여적 거버넌스가 형성될 때 사회적경제의 근간인 협력과 연대의 가치가 실현된다.

2. 사회적경제 참여의 정치적 의미

한국 사회를 정치적 민주화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위축된 국가와 불완전한 시장의 대안으로 성장한 시민사회 및 사회적경제는 결사체 민주주의(associative democracy)의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 민주주의 이론가들이 21세기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중 하나로 결사체 민주주의를 예견한 이후(안승국, 1997; 임혁백, 1998), 한국의 결사체, 특히 사회적경제는 양적으로 성장했으며 지역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자율성을 토대로 경제적·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경제는 결사체 민주주의 이론에서 강조하는 정부 업무를 대신할 거버넌스를 주도하면서, 정보제공, 사회적 자본의 증대, 민주적 시민문화의 전파를 통한 적극적 시민의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Hirst, 1994; Cohen & Rogers, 1992). 즉, 사회적경제는 상당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첫째, 사회적경제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 방안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거버넌스는 매우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간략히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주체 간 조정의 양식”이라고 정의할 때(유현종·정무권, 2018, 38) 다양하고 혼합된 조직들이 상호작용하고 조정하는 양식으로 개념화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다양한 사회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행위자들의 협력, 연계, 파트너십 공고화, 사회적 자본의 증가는 필

연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자산을 규명하고 협력의 방식을 정의할 때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가 지역 거버넌스에 의해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 정책을 공동으로 형성할 때 조정과 타협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참여자는 정치적 제도형성을 위해 정치참여를 해야 하며 정책의 공동 구축(co-construction)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치활동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은 정당이 대표할 수 없는 기능적·지역적 대표성을 높이며, 참여민주주의의 외연을 넓힌다.

둘째, 사회적경제는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 정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Ostrom(1964)의 관점에 따르면 지역의 사회적기업가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기에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으며 해결하기에도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 있다(Frank & Shockley, 2016).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회적경제에 관여하는 사회적기업가는 지역사회의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며 그 견해를 지역 정치에 투입하고 중앙정부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부가적인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경제는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정부의 역량을 높인다.

셋째,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증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역량을 높인다. 사회적경제는 호혜성을 위해 협력하고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신뢰, 규범, 네트워크를 확충한다. 사회적 자본이 많은 지역사회는 민주주의에 필요한 사회통합, 포용성, 의사결정의 효율화를 통해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다(Putnam, 1995). 구체적으로, 사회적경제 참여자들은 직접 의제를 탐색하고 구체화하여 함께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사결정의 과정을 꾸준히 거친다. 창업자나 설립자의 독단적인 결정보다 의사결정의 권한을 갖춘 참여자의 숙고와 토론을 거쳐 결정이 내려질 때 지역사회에서의 실행력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의 발전과정에서 발휘되는 사회적 자본은 원활한 토론, 숙고, 공동의사결정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는 민주적 시민문화의 전파를 통해 지역사회의 적극적 시민을 양성한다. Dewey(1936)에 따르면 학습은 적극적인 경험을 통한 성찰과 변화의 과정이다. 학습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넘어서 자기 주도성을 갖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새로운 대안을 창의적으로 제시하는 활동이다. 사회적경제는 공식적인 교육을 넘어 비형식적이지만 경험을 통해 자기 발전을 이루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로 사회적경제 현장에서도 “현장에서 출발하고 현장을 풍성하게 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학습이 중요함을 강조한다(이가람·신효진, 2022, 109). 사회적경제에서 학습의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신뢰를 형성하고 연대와 협력을 중시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참여하게 된다.

이처럼 사회적경제는 정치적 영역과 연결된다. 거버넌스의 작동과정에서, 학습과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정치적 협의와 의사표명이 필요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적 지원

의 필요성 요청을 위한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촉진하는 사회적 자본도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과정에서 발현된다. 그중에서도, 결사체 민주주의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경제는 투표와 같은 제도적 정치참여보다는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활성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우선,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가 시민들의 선호와 의사 그리고 지역의 정보를 풍부하게 반영하고 이를 구체화하고자 할 때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행해지는 투표나 선거의 방식만으로는 시민의 요구와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대표자를 선출하여 위임하는 선거와 같은 공식적이되 제한적인 수단보다는, 보다 자유롭고 역동적인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방식을 활용한 이외의 방식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로 활용되는 언론기관과 공공기관 방문 및 접촉, 정보공유, 온라인 소통도 비제도적 참여에 속한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와 비제도적 정치참여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검토가 필요하다.

3. 가설의 도출: 사회적경제와 비제도적 정치참여

정치참여란 참여자, 권력의 근원 및 배분, 참여의 유형과 단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정의될 수 있지만(Arnstein 1969; Norris 2002), 일반적으로 정부 관료제에 대한 위임자로서의 시민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유무형의 행위를 포괄한다. 정치참여의 과정에서 시민들은 정부의 운영과 정책 결정·집행의 방향에 대해 지지와 반대를 표명한다. 다양한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은 투표를 비롯하여 시위, 서명, 정당 등 조직에의 가입, SNS 활동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정치적 참여는 선거 및 투표 참여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제도적 참여와 의견 개진, 서명, 방문, 정보공유, 조직에의 가입,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등으로 구성되는 비제도적(비공식적)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Easter & Vinken 2003; Norris 2002; 강은주·이숙중, 2020; 이재현·김욱, 2018). 제도적 참여는 관습적(conventional) 참여로, 비제도적 참여는 비관습적(unconventional) 참여로 불리기도 한다.

사회적경제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치참여는 제도적 참여보다는 비제도적 참여와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 투표나 선거만으로는 이웃과 지역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지역의 문제에 주목하고, 이를 조사·분석하고, 여론을 반영하여 문제를 공론화하고, 궁극적으로 집단 의제화하여 자율적이고 공동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회적경제 활동은 그 전 과정이 하향식의 문제해결보다는 상향식의 해결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과정 모두는 단순히 선거로 대표자를 선정하는 제도적 정치참여보다는 다채로운 형태의 비제도적 정치참여와 관련되어 있다. 가령 사회적경제 활동의 증가가 주로 불균형한 자원의 배분과 이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사회적경제 참여와 비제도적 정치참여 간의

연계(association)를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이론적 가능성이 있다. 불평등의 심화는 제도적인 정치참여를 줄이며(Oliver, 2001; Solt, 2008; Stockemer & Scruggs, 2012),²⁾ 반면 비제도적인 정치참여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기존 연구의 발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허석재, 2015). 이는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양식을 활용한 정치참여를 통해 1인 1표의 제도적 제약을 뛰어넘어 그 영향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적극성을 지닌 결사체로서의 사회적경제 참여자의 성격과 연결 가능한 지점이다. 투표가 정치참여의 여러 양식 중에서 하나에 불과하며(Verba & Nie, 1987) 간접적인 방식의 문제해결책에 가깝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추론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도 사회적경제 참여자들은 비참여자에 비해 더 많은 비제도적 정치참여를 할까? 투표 외의 다양한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양식 중, 사회적경제 참여자들은 어떤 종류의 참여에 가장 적극적일까? 각각의 참여양식마다 그에 소요되는 비용, 적극성의 정도, 주체 및 주도성의 정도가 각기 다르다. 특히 결사체로서의 사회적경제의 성격을 고려하는 경우, 참여자들은 비제도적 정치행동 중에서도 개인보다는 집단 기반의 활동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다. 이 같은 질문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은 제도적 참여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사회적경제 참여자의 존재 여부 및 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경험적 공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와 정치참여를 직접 연결하여 분석한 기존 연구는 매우 드물다. 몇몇 연구는 사회적경제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거나, 혹은 특정 국가나 지역의 사회적경제 참여 경향이나 단체 참여자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였다(Tsobanoglou, 2012; Quarter et al., 2017; Lévesque & Ninacs 2000). 그러나 사회적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결사체 참여와 정치참여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는 경우, 다수의 연구를 찾을 수 있다. 정당, 노동조합, 문화단체, 기타 단체 등에 대한 참여와 정치참여의 관계를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으며(김상돈·김태준, 2008), 이러한 사실은 독일과 스웨덴에서도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기타 단체 가입 및 노동조합 가입에 적극적인 사람이 정치효능에 매개되어 정치참여에 적극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분

2) 불평등과 정치참여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원(resource)이론과 갈등(conflict)이론의 이론적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자원이론의 시각은 불평등의 증가에 따른 권력자원 및 부의 불평등한 배분이 유권자들의 정치적 배제와 정치적 무관심(apoliticism)을 불러일으켜 투표율의 저하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Goodin & Dryzek, 1980). 반면 갈등이론의 시각은 불평등의 증가가 저소득층의 불만을 불러일으켜 궁극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정치적 결집과 궁극적으로 더 많은 정치참여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예상한다(Brady 2004). 이 메커니즘에서 정치적 결집이란 곧 단체행동의 증가를 예상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 참여와 정치행동의 증가 사이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연결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재까지의 기존이론의 경험적 발견은 불평등의 증가가 투표와 같은 제도적 정치참여를 줄인다고 보고하는 연구의 수가 조금 더 많다(Stockemer & Parent, 2014; Stockemer, 2017; Cho, 2019). 다만 국가 수준에서 불평등의 증가와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수는 매우 적다.

석 대상의 범위를 좁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발적 결사체 참여에 적극적인 교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많은 정치참여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상돈·정일준, 2010). 청소년의 자발적 결사체와 정치참여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에서도 자발적 결사체 활동은 정치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황미영, 2021). 이 분석은 정치적 대화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부분 매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도묘연(2017)은 결사체 활동과 시민성 그리고 촛불집회 참여의 경로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정치적 결사체 활동과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 모두에서 촛불집회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사체 활동은 시민성을 높이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 이를 통해 촛불집회 참여를 높이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결사체에 대한 참여는 다양한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결사체로 구성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의 참여가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아울러 다수의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정치참여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경제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한다면, 사회적경제 참여는 단체 및 공동의 활동 참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증진하는 과정이기에, 궁극적으로 정치참여의 양과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이론적 관계를 충분히 상정할 만하다.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여 사이의 인과성에 대한 탐색적 접근은 송경재(2013)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연구는 특히 사회적 자본이 관습적(제도적) 참여와 비관습적(비제도적) 정치참여에 갖는 영향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지점과 유사한 연구 질문을 탐색하고 있다. 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은 제도적 정치참여와 비제도적 정치참여 모두에 영향을 주지만 그 방향성은 다소 달랐는데,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고 공동체의 이익이 중요할수록 사람들은 비제도적 정치참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적경제 참여의 출발점이 다름 아닌 정부 주도의 거버넌스에 대한 상당한 불만과 지역 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안 모색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사회적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제도의 틀 내에서의 선거와 같은 제한적 참여보다는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추론은 분석의 가치가 있다. 추가적으로, 사회적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성을 고려하면, 시위나 정치적 모금 등의 비제도적 참여활동이 투표나 선거에 비해 더 큰 비용과 시간이 들어도 불구하고 이를 기꺼이 감수하려는 성향이 있으리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4. 연구의 모형

위의 논의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참여와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1: 사회적경제 참여자는 비참여자에 비해 더 많은 비제도적 정치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H1-1: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유형 중에서도, 결사체로서의 사회적경제의 성격에 비추어, 사회적경제 참여자들은 집단행동, 단체 기반의 활동에 적극적일 것이다.(시위참여, 모임·집회 참여, 정치 관련 정보 공유, 온라인 집단행동 참여)

H1-2: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유형 중에서도, 사회적경제 참여자들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유형의 참여에도 보다 적극적일 것이다.(기부·모금 참여, 시위, 집회 참여)

III. 연구의 방법

1. 표본 수집과 특성

이 연구는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토대연구 지원사업의 주관으로, 2019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전국 19개 지역에서 100명씩 추출한 1,9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실증적 분석을 위해 활용하였다. 조사 지역은 한국에서 사회적경제의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진 19개 지역을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선정하였다.³⁾ 표본 추출과정에서의 대표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위해 조사군 설정 방식을 활용하였다. 먼저 조사지역 내 조사구를 임의로 할당하고 조사구 내에서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 모집단 비율을 설정하고 그 비율에 부합하도록 표본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조사대상은 <표 1>과 같이 구성되었다.

3) 19개 조사대상 지역은 서울(마포, 성북, 동작), 경기(안산, 안성, 시흥), 인천(계양), 강원(원주), 전남(완주, 순천), 전북(진안), 광주(광산), 충남(홍성, 서천), 충북(옥천), 대전(대덕), 경남(거창), 부산(동구), 제주(서귀포)이다. 이 지역들은 사회적경제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한 행정학 박사 3명, 정치학 박사 1명, 경제학 박사 1명 등 총 5명의 토론을 거쳐 선정되었다. 사회적경제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분석을 시행하였기에 선택 편위(bias)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본 표본의 분명한 한계이다. 다만, 이러한 선택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응답자 중 각 지역 내 사회적경제 참여자는 상당한 소수였으며, 만약 전국단위 랜덤 층화추출을 진행하였다면 분석에 필요한 수준의 사회적경제 참여자 샘플을 거의 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음을 밝힌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1,900)

구분		빈도 (N)	비율 (%)	구분		빈도 (N)	비율 (%)
성별	남	1,007	53.0	거주 기간	5년 미만	339	17.8
	여	893	47.0		5-10년 미만	317	16.7
연령	19-29세	374	19.7		10-20년 미만	539	28.4
	30-39세	322	16.9		20년 이상	705	37.1
	40-49세	428	22.5	거주 지역	도시	1,200	63.2
	50-59세	517	27.2		비도시	700	36.8
	60-64세	259	13.6	교육 수준	초등학교 중퇴 및 졸업	46	2.4
가구 형태	1인 가구	195	10.3		중학교 중퇴 및 졸업	97	5.1
	부부가구	331	17.4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975	51.3
	부부+자녀	1,283	67.5		대학교 중퇴 및 졸업	756	39.8
	본인+자녀	29	1.5		대학원 이상	26	1.4
	부부+자녀+손자	22	1.2	주거 형태	아파트	790	41.6
	본인+자녀+손자	2	0.1		단독주택	679	35.7
	기타	38	2.0		연립, 다세대빌라	425	22.4
					기타	6	0.0

표본은 남성이 53%, 여성이 47%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대는 19세부터 64세까지 다섯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20대가 19.7%, 30대가 16.9%, 40대가 22.5%, 50대가 27.2%, 60대가 13.6%로 40대와 50대의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었다. 도시와 비 도시 지역 거주자가 각각 63.2%, 36.8%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중퇴 이상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방법

조사는 설문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조사원이 주민을 대면하여 조사의 개요, 목적, IRB 승인여부 등을 설명한 후 시작하였다. 각각의 질문을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자가 답하는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결측 문항을 최소화하여 무응답을 줄이고 응답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논문처럼 분석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를 동일한 응답원 및 측정도구에 의해 측정된 경우에는,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다만, 본 연구는 설문지 작성 단계에서 역방향 응답 구성, 다른 질문형태의 고안, 조사원 교육 등을 수행하여 자기 응답을 강화하는 경향성이 다소 억제되게끔 편의를 줄이고자 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님을 연구의 한계로 남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종속변수인 비제도적 정치참여는 한국종합사회조사의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는 여러 설문조사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정치참여와 관련된 문항이다. 각 응답자에게 지난 1년간 혹은 그 이전에 다양한 유형의 비제도적 정치참여를 한 적이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유형은 약 9개로, 진정서 서명이나 소비 또는 불매의 경험과 같은 다소 소극적인 형태의 참여에서부터 시위, 집회 등의 참여, 정치인·공무원·언론 접촉 등 적극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형태의 정치참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비제도적 정치참여 여부를 확인하였다.

독립변수는 사회적경제 참여이다. 참여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조합원/주주로서의 참여 여부와 그 빈도, 재정기여도로 나누어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협의의 사회적경제 조직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폭넓게 이해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일반협동조합, 마을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어촌공동체회사, 작목반(회) 등을 포함하였다. 더 넓은 의미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범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표 2〉 변수의 측정

유형	변수명	조작적 정의
종속 변수	비제도적 정치참여 (9종)	진정서 서명 정치, 윤리, 환경적 소비/불매 경험 사회 및 정치 활동 위한 기부 및 모금 선거와 관련된 글, 동영상 등을 공유 온라인 집단행동 참여 인터넷 커뮤니티 및 신문에 정치관련 댓글 작성 시위참여 정치모임 및 집회참여 정치인, 공무원, 언론접촉 (1(없다) 2(없지만 앞으로 할 수도 있다) 3(그보다 전에 한 적 있다) 4(지난 1년동안 한 적 있다))
독립 변수	사회적경제 조직 참여여부	지난 1년간 다음 사회적경제조직에 하나라도 조합원/주주로서 참여한 경험 (참여 = 1, 비참여 = 0)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생협, 의료생협, 자활기업, 일반협동조합, 마을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어촌공동체회사, 작목반(회)
	사회적경제 조직 참여정도(빈도)	지난 1년간 다음 사회적경제조직에 조합원/주주로서 참여한 빈도, 0~4로 코딩 (4회 이상은 4로 코딩)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생협, 의료생협, 자활기업, 일반협동조합, 마을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어촌공동체회사, 작목반(회)
	사회적경제 조직 재정기여도	사회적경제조직에의 재정기여액 (참여한 모든 조직에서 출자한 액수의 총액, 천원)
통제	중앙정부신뢰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1=전혀 신뢰 없음 ~ 5=매우 신뢰

변수	일반신뢰	일반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신뢰의 정도 1=항상 신뢰 ~ 4=항상 조심한다
	연령	응답자의 만 나이
	성별	남 = 1, 여 = 0
	이념 성향	진보적(1점)~보수적(6점)
	학력수준	초등 졸 이하, 중등 졸, 고등 졸, 대졸이상

분석에서는 주요 통제변수로 일반신뢰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를 구분하여 포함하였다. 이는 Uslaner(1997)의 구분을 따른 것으로, 신뢰는 정치참여를 종속변수로 하는 대부분의 기존연구에서 통제변수로 활용되어왔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정치 참여도가 낮다는 기존연구의 발견을 기반으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기타 사회적 자본 관련 기존 연구 분석에서도, 신뢰, 규범, 네트워크가 다양한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강은주·이숙종, 2020), 대인 신뢰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연구(김기동·이정희, 2017), 신뢰, 응집력,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정치참여 의지도 높다는 연구(김상원, 2018) 등이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대인신뢰가 비제도적 참여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대인신뢰를 분석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타 통제변수로는, 남성, 고령자, 보수적, 고학력자일수록 정치참여도가 더 높은 경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성별, 연령, 이념 성향, 학력 수준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4. 분석방법

분석은 평균값 차이 분석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에 조합원 및 주주로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제도적 정치참여를 항목별 평균값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나아가 회귀분석을 통해 사회적경제 참여가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사회적경제 참여는 참여경험, 참여횟수, 재정기여 여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서로 조금씩 다른 종속변수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분석결과가 일관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여 분석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수는 9개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항목을 활용하였다.

- 1) 비제도적 정치참여(각 항목별) = 사회적경제 참여경험여부(dummy)*X₁ + 중앙정부 신뢰*X₂ + 일반신뢰*X₃ + 연령*X₄ + 성별*X₅ + 이념성향*X₆ + 학력*X₇ + 상수항
- 2) 비제도적 정치참여(각 항목별) = 사회적경제 참여빈도*X₁ + 중앙정부 신뢰*X₂ + 일반신뢰*X₃ + 연령*X₄ + 성별*X₅ + 이념성향*X₆ + 학력*X₇ + 상수항
- 3) 비제도적 정치참여(각 항목별) = 사회적경제 재정기여도*X₁ + 중앙정부 신뢰*X₂ + 일반신뢰*X₃ + 연령*X₄ + 성별*X₅ + 이념성향*X₆ + 학력*X₇ + 상수항

IV. 분석결과

1. 평균값 차이 분석

우선 사회적경제 조직에 조합원이나 주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지역주민과 그렇지 않은 지역주민 사이에 비제도적 정치적 참여행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지 직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평균 동일성에 대한 t검정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시위참여, 정치모임 및 집회 참여, 정치인·공무원·언론 접촉, 기부·모금 참여, 정치정보 SNS에 공유, 온라인상 집단행동 등에서 나타났다. 이 참여방식들은 다른 항목들보다 비교적 강도와 비용이 높은 참여유형에 속하고 결사체의 집단적 참여와 관련된다. 이는 본 연구가 제시하는 가설, 즉 사회적경제 참여는 비제도적 정치참여 중에서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강력한 참여와 더욱더 관련될 것이라는 내용과 일견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t검정 결과와 회귀분석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석의 주의를 요한다.

<표 3> 조합원 및 주주로서의 사회적경제 참여 여부에 따른 평균값 차이 분석

종속변수	평균		표준편차		t	t검정 유의도 [^]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진정서 서명	2.45	2.19	1.10	1.08	1.085	0.278
정치적 구매/불매	2.40	2.08	1.04	0.92	1.358	0.175
시위참여	2.00	1.66	0.92	0.83	1.819	0.069*
정치모임·집회참여	2.05	1.63	0.89	0.82	2.287	0.022**
정치인·공무원·언론접촉	1.85	1.47	0.81	0.71	2.339	0.019**
기부·모금	2.50	1.74	1.19	0.91	3.696	0.011**
정치정보 SNS에 공유	2.20	1.59	1.24	0.85	3.175	0.041**
온라인 상 집단행동	2.05	1.65	0.89	0.86	2.047	0.041**
인터넷·신문 댓글작성	1.60	1.47	0.68	0.79	0.733	0.464

[^] 평균 동일성에 대한 t검정(양측검정); * p < 0.05; ** p < 0.01; *** p < 0.001

2. 회귀분석

사회적경제 참여여부, 참여빈도, 재정기여도에 대한 비제도적 정치참여 유형 각각의 회귀 분석 결과를 아래 <표 4>, <표 5>, <표 6>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비제도적 정치참여 유형의 수는 총 9개로 참여 여부, 빈도, 재정기여도 각각의 결과를 제시하기에는 그 수가 많아, 지면의 한계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만을 보고한다. 아래 <표 4>은 독립변수인

사회적경제 참여를 각종 사회적경제 조직에 조합원/주주로서의 참여 경험이 있는지(더미변수)로 측정하여 활용한 분석결과이다.

〈표 4〉 사회적경제 참여여부와 비제도적 정치참여

종속변수	독립변수	Coef.	Std. err	P
정치모임· 집회참여	사회적경제참여	0.317*	0.182	0.081
	일반신뢰	0.018	0.031	0.565
	중앙정부신뢰	0.114***	0.022	0.000
	연령	0.001	0.002	0.558
	성별	0.036	0.037	0.334
	이념성향	-0.119***	0.019	0.000
	학력	0.117***	0.028	0.000
con_	1.122***	0.182	0.000	
정치인·공무원· 언론접촉	사회적경제참여	0.322**	0.159	0.043
	일반신뢰	0.156***	0.028	0.000
	중앙정부신뢰	0.013	0.020	0.512
	연령	0.000	0.001	0.712
	성별	0.056*	0.033	0.086
	이념성향	-0.049***	0.016	0.003
	학력	0.063**	0.024	0.011
con_	0.927***	0.159	0.000	
기부·모금	사회적경제참여	0.625***	0.198	0.002
	일반신뢰	0.297***	0.034	0.000
	중앙정부신뢰	-0.004	0.024	0.868
	연령	0.003	0.002	0.101
	성별	0.039	0.041	0.332
	이념성향	-0.093***	0.020	0.000
	학력	0.184***	0.030	0.000
con_	0.454***	0.198	0.022	
정치정보 SNS에 공유	사회적경제참여	0.557***	0.188	0.003
	일반신뢰	0.133***	0.033	0.000
	중앙정부신뢰	-0.020	0.023	0.398
	연령	-0.008***	0.002	0.000
	성별	-0.030	0.039	0.440
	이념성향	-0.049**	0.019	0.012
	학력	0.119***	0.029	0.000
con	1.373***	0.188	0.000	
온라인 상 집단행동	사회적경제참여	0.322*	0.185	0.082
	일반신뢰	0.154***	0.032	0.000
	중앙정부신뢰	-0.012	0.023	0.601
	연령	-0.011***	0.002	0.000
	성별	-0.019	0.038	0.623
	이념성향	-0.083***	0.019	0.000
	학력	0.167***	0.028	0.000
con	1.414	0.185	0.000	

Number of obs=1,900, * p < 0.05; ** p < 0.01; *** p < 0.001

분석결과 사회적경제 참여경험은 정치모임 및 집회 참여, 정치인·공무원 및 언론접촉 여부, 기부·모금 참여, 정치관련 정보의 SNS 공유, 온라인상 집단행동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회적경제 참여자의 적극적인 비제도적 정치참여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집회 참여, 정치인·공무원 및 언론접촉, 기부·모금 참여 등은 적극적인 정치적 행동일 뿐만 아니라 시간적, 재정적 비용지출을 감내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그 적극성의 수준이 다른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비해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사회적경제 참여가 진정서 서명, 정치적 구매/불매, 시위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정치모임 및 집회 참여의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비제도적 정치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 공동체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의 특성에 걸맞은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남성일수록, 진보적일수록, 고학력일수록 더 많은 비제도적 정치참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 <표 5>는 독립변수인 사회적경제 참여를 각종 사회적경제조직에 조합원/주주로서 참여한 빈도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표 5> 사회적경제조직 운영참여(횟수)와 비제도적 정치참여

종속변수	독립변수	Coef.	Std. err	P
시위참여	사회적경제 운영참여횟수	0.051**	0.024	0.034
	일반신뢰	0.146***	0.032	0.000
	중앙정부신뢰	0.013	0.023	0.565
	연령	-0.001	0.002	0.561
	성별	0.076**	0.038	0.044
	이념성향	-0.097***	0.019	0.000
	학력	0.091***	0.028	0.001
	con	1.230***	0.184	0.000
정치모임· 집회참여	사회적경제 운영참여횟수	0.044*	0.024	0.065
	일반신뢰	0.020	0.032	0.526
	중앙정부신뢰	0.115***	0.022	0.000
	연령	0.001	0.002	0.530
	성별	0.036	0.037	0.330
	이념성향	-0.119***	0.019	0.000
	학력	0.119***	0.028	0.000
	con	1.109***	0.181	0.000
기부·모금	사회적경제 운영참여횟수	0.074***	0.026	0.005
	일반신뢰	0.300***	0.034	0.000
	중앙정부신뢰	-0.002	0.024	0.920
	연령	0.003*	0.002	0.085

	성별	0.039	0.041	0.332
	이념성향	-0.093***	0.020	0.000
	학력	0.187***	0.030	0.000
	con	0.425**	0.198	0.032
정치정보 SNS에 공유	사회적경제 운영참여횟수	0.064***	0.025	0.010
	일반신뢰	0.136***	0.033	0.000
	중앙정부신뢰	-0.018	0.023	0.435
	연령	-0.008***	0.002	0.000
	성별	-0.030	0.039	0.440
	이념성향	-0.049**	0.019	0.012
	학력	0.122***	0.029	0.000
	con	1.347***	0.188	0.000
온라인 상 집단행동	사회적경제 운영참여횟수	0.046**	0.024	0.041
	일반신뢰	0.156	0.032	0.110
	중앙정부신뢰	-0.011	0.023	-0.011
	연령	-0.011	0.002	-0.165
	성별	-0.018**	0.038	-0.011
	이념성향	-0.083	0.019	-0.100
	학력	0.168	0.028	0.137
	con	1.401***	0.185	0.000

Number of obs=1,900,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5〉의 분석결과는 우선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에 조합원/주주로서 참여한 횟수가 더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시위참여, 정치모임 집회 참여, 기부 및 모금 참여, 정치적 정보의 SNS 공유, 온라인상 집단행동 참여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표 4〉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이번에는 가장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참여유형 중 하나인 시위참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점에 주목할만하다. 사회적경제 조직에 더 많이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시위참여 및 집회와 모임참여, 기부/모금 참여와 같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정치참여에도 더 적극적이며, 특히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정보를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는 집단행동에 기반한 공동체적 활동에 더 적극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종속변수의 종류에 따라 일반신뢰와 중앙정부 신뢰에 대한 신뢰의 영향력이 다소 혼재되어 관찰되었으나 두 신뢰 유형이 동시에 유의미한 경우는 없었다. 〈표 4〉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일반 시민(이웃 등)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비제도적 정치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웃과 지역주민과 같은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의 핵심적인 특성을 생각해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성별, 이념성향, 학력의 영향은 비교적 일관적이었으며 여성일수록, 보수적일수록, 저학력일수록 비제도적 정

치참여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사회적경제 재정기여와 비제도적 정치참여

종속변수	독립변수	Coef.	Std. err	유의확률
정치적 구매/불매	사회적경제 재정기여	0.001**	0.001	0.051
	일반신뢰	0.156***	0.040	0.000
	중앙정부신뢰	0.088***	0.029	0.002
	연령	-0.003	0.002	0.149
	성별	-0.010	0.047	0.839
	이념성향	-0.066***	0.024	0.005
	학력	0.186***	0.035	0.000
con	1.053***	0.231	0.000	
시위참여	사회적경제 재정기여	0.001**	0.000	0.011
	일반신뢰	0.143***	0.032	0.000
	중앙정부신뢰	0.014	0.023	0.551
	연령	-0.001	0.002	0.558
	성별	0.076*	0.038	0.044
	이념성향	-0.096***	0.019	0.000
	학력	0.091***	0.028	0.001
con	1.236***	0.184	0.000	
정치모임· 집회참여	사회적경제 재정기여	0.001*	0.000	0.078
	일반신뢰	0.018	0.031	0.572
	중앙정부신뢰	0.115***	0.022	0.000
	연령	0.001	0.002	0.529
	성별	0.036	0.037	0.336
	이념성향	-0.118***	0.019	0.000
	학력	0.119***	0.028	0.000
con	1.111***	0.181	0.000	
기부·모금	사회적경제 재정기여	0.001**	0.000	0.011
	일반신뢰	0.296***	0.034	0.000
	중앙정부신뢰	-0.002	0.024	0.950
	연령	0.003*	0.002	0.085
	성별	0.038	0.041	0.344
	이념성향	-0.092***	0.020	0.000
	학력	0.188***	0.030	0.000
con	0.427	0.198	0.031	
온라인 상 집단행동	사회적경제 재정기여	0.001**	0.000	0.018
	일반신뢰	0.153***	0.032	0.000
	중앙정부신뢰	-0.011	0.023	0.633
	연령	-0.011***	0.002	0.000
	성별	-0.019	0.038	0.626
	이념성향	-0.083***	0.019	0.000
	학력	0.167***	0.028	0.000
con	1.407***	0.185	0.000	

Number of obs=1,900,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6〉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재정기여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비제도적 정치참

여의 유형 중에서도 정치적 구매/불매, 시위, 정치모임집회, 기부 및 모금, 온라인상 집단행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정치적 구매·불매 운동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모두 <표 4>과 <표 5>의 결과와 대부분 일치하여, 사회적경제 참여를 참여경험, 참여횟수, 재정기여 중 어떤 것으로 분석하여도 대부분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종속변수가 정치모임 및 집회참여인 경우를 제외하면, 중앙정부신뢰보다는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비제도적 정치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남성일수록, 진보적일수록, 고학력일수록 더 많은 비제도적 정치참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V. 연구의 함의와 결론

아래 <표 7>은 이상의 분석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한 것이다. 세 종류(참여경험, 빈도, 재정기여도)로 측정된 사회적경제 참여 중 어떤 변수로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었던 비제도적 정치참여 변수는 정치적 모임 및 집회참여, 기부 및 모금 참여, 온라인 상 집단행동 참여 변수의 세 가지였다. 시위참여와 정치적 정보의 SNS 공유 변수 역시 적어도 둘 이상의 사회적경제 참여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사회적경제 참여로 설명될 수 있는 공통적인 비제도적 정치참여 변수들은 대체로 집단 및 단체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표 7> 사회적경제 참여로 설명되는 유의한 정치참여의 목록

종속변수	독립변수		
	사회적경제 참여경험	사회적경제 참여횟수	사회적경제 재정기여
정치적 구매/불매	×	×	○
시위참여	×	○	○
정치모임·집회참여	○	○	○
정치인·공무원·언론 접촉	○	×	×
기부·모금	○	○	○
정치정보 SNS에 공유	○	○	×
온라인 상 집단행동	○	○	○

이 연구의 가장 주된 의의는 사회적경제에 참여하는 사람이 비참여자에 비해 정치적으로도 개인 기반(individual-based)의 소극적인 참여보다는 보다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이며 결사

체적 참여행태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모든 사회적경제 참여 유형에서의 경험과 강도가 정치모임과 집회 참여, 기부 및 모금 참여, 온라인 상 집단행동에 대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된 것은 개인적인 참여를 넘어서는 집단으로써의 참여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특히 정치활동 가운데 시위참여의 경우 단순 참여경험을 넘어서 참여횟수가 많고 재정기여도가 높을수록 참여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사회적경제에 참여하는 사람은 비참여자들에 비해 다양한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적극적이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집단적으로 생각을 공유하고 움직이려는 특성이 있었으며, 특히 시간과 비용이 보다 많이 드는 형태의 비제도적 정치참여에도(시위 참여, 집회참여, 기부 모금참여) 적극적이라는 점을 일관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참여여부, 참여횟수, 재정지원도 등 사회적경제 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조금씩 다른 종속 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한 경우 모두에서 일관된 것으로 나타나, 분석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를 인과관계의 증명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특히 정치참여의 결과 사회적경제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역방향 인과관계(reverse causality)의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추후, 보다 면밀한 인과적 매커니즘 제시 및 진화된 방법론 활용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사회적경제 참여는 비제도적 정치참여와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사회적경제 참여자들은 비참여자에 비해 그 적극성의 수준이 높고, 집단행동을 지향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형태의 정치참여에 더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가 가지는 결사체적 성격 및 집단의 공유 활동 및 대안제시 등의 적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서 사회적경제 참여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 보다 적극적인 성격의 정치참여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해 더욱 체계적인 인과적 모델 제시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경제 참여자의 정치와 정치적 행위자에 대한 관점은 무엇이며, 이들이 참여하는 경로와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조는 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추가적 분석은 후속 연구 과제로 남긴다.

참고 문헌

- 강은주·이숙중. (2020). 사회자본이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SNS 이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8(1): 97-127.
- 김기동·이정희. (2017). 한국 시민들의 신뢰수준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 연구. 「아태연구」. 24(2): 5-39.
- 김상돈·김태준. (2008). 자발적 결사체 가입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정치효능감과 시민권 덕목의 매개효과 분석. 「사회과학연구」. 16(1): 68-112.

- 김상돈·정일준. (2010). 대학교수의 자발적결사체가입이 정치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교육정책수용과 교육기관신뢰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18(1): 44-86.
- 김상원. (2018). 사회자본이 노인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공공정책연구」. 34(2): 47-66.
- 김정원. (2020). 사회적경제는 시티즌십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의 경험에 대한 고찰. 「경제와 사회」. 126: 302-335.
- 김종걸. (2020). 자유로서의 사회적경제. 서울: 북사피엔스.
- 도모연. (2017). 결사체 활동, 시민성 그리고 촛불집회 참여의 경로구조. 「현대정치연구」. 10(2): 5-41.
- 안승국. (1997). 결사체민주주의와 정치공동체: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대전환 모색. 「한국정치학회보」. 31(3): 69-88.
- 유현중·정무권. (2018). 한국 사회적경제 거버넌스와 지역발전. 「지역발전연구」. 27(2): 33-82.
- 이가람·신효진. (2021). 교육에서 학습으로 - 사회적경제 인재양성교육 개선을 위한 실행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1(2): 95-121.
- 이재현·김욱. (2018). 비제도적 정치참여가 제도적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효능감과 정치신뢰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치학회보」. 8(1): 89-111.
- 임혁백. (1998). 세계화 시대의 이익집단정치 모색: 결사체 민주주의. 「성곡논총」. 29(2): 389-432.
- 송경재. (2013). 사회적 자본과 한국의 시민참여: 관습적·비관습적 참여와 사회적 자본. 「한국정당학회보」. 12(2), 221-244.
- 정건화. (2012). 민주주의, 지역 그리고 사회적경제. 「동향과 전망」. 86: 7-43.
- 정소윤·한상일. (2014). 한국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생성과 제도화. 「지역발전연구」. 23(1): 193-222.
- 주성수. (2019). 사회적경제: 이론, 제도, 정책(개정판).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2). 사회적경제의 의의.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econ/concept.do?m_cd=E021 (검색일: 2022년 4월 13일).
- 한상일. (2019). 지역공동체 참여의 이론과 현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공동체를 위한 대안의 모색. 서울: 집문당.
- 황미영. (2021). 청소년의 자발적 결사체 활동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대화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8(12): 133-162.
- 허석재. (2015). 소득 불평등과 정치참여의 양식. 「한국정당학회보」, 14(3), 41-67.
- Arnstein, S. R. (196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5(4), 216-224.
- Brady, H. E., Verba, S. & Scholzman, K. L. (1995). Beyond Ses: A Resource Mod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2): 271-294.
- Brady, H. E. (2004). An analytical perspective on participatory inequality and income inequality. *Social inequality*, 667-702.
- Cho, I. (2019), Economic Inequalit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Evidence from East Asian Countries in Chong-Min Park and Eric M. Uslaner (eds.), [Inequality and Democratic Politics in East Asia].

- London: Routledge.
- Cohen, J. & Robers, J. (1992). Secondary association and democratic governance. *Politics and Society*, 20(4): 393-472.
- Defourny, J. & Develtere, P. (1999). *The Social Economy: The Worldwide Making of a Third Sector*. Liege, Belgium: Centre D'economie Sociale, Universite de Liege.
- Dewey, J. (1936). The theory of the Chicago experiment. In K. C. Mayhew & A. C. Edwards, *The Dewey School: The Laboratory School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1896-1903*. (App. II) New York: Appleton-Century.
- Ester, P., & Vinken, H. (2003). Debating civil society: On the fear for civic decline and hope for the internet alternative. *International Sociology*, 18(4), 659-680.
- Frank, P. & Shockley, G. (2016). A critical assessment of social entrepreneurship: Ostromian polycentricity and Hayekian knowledge.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45. 10.1177/0899764016643611.
- Goodin, R., & Dryzek, J. (1980). Rational participation: The politics of relative power.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0(3), 273-292.
- Han, S., Chung, M. & Park, M. (2014). Local stakeholder involvement and social innovation in Korean co-operatives: the cases of Wonju and Ansong cities.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49(2): 327-343.
- Hirst, P. (1994). *Associative Democracy: New Forms of Economic and Social Governance*. Amherst, MA: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 Lévesque, B., & Ninacs, W. A. (2000). The social economy in Canada: The Quebec experience. *Social economy: International debates and perspectives*, 112-129.
- Norris, P. (2002). *Democratic Phoenix: Reinventing Political Activis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utnam, R. D.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 OECD. (2022). Social economy. <https://www.oecd.org/employment/leed/social-economy.htm> (검색일: 2022년 4월 13일).
- Ostrom, E. (1964). *Public entrepreneurship: A case study in ground water basin management*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Oliver, J. E. (2001). *Democracy in Suburbia*. Princeton University Press.
- Quarter, J., Mook, L., & Armstrong, A. (2017). *Understanding the social economy: A Canadian perspective*.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Solt, F. (2008). "Economic Inequality and Democratic Political Engagemen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2-1: 48-60.
- Stockemer, D., and Scruggs, L. (2012). "Income Inequality, Development, and Electoral Turnout - New Evidence on a Burgeoning Debate." *Electoral Studies*. 31-4. 764-773.
- Stockemer, D., & Parent, S. (2014). *The inequality turnout Nexus: new evidence from presidential elections*.

- Politics & Policy, 42(2), 221-245.
- Stockemer, D. (2017). What affects voter turnout? A review article/meta-analysis of aggregate research. *Government and Opposition*, 52(4), 698-722.
- Tsobanoglou, G. (2012). Barriers to participation in the social economy in Greece. *Oñati Socio-Legal Series*, 2(2).
- Verba, S., & Nie, N. H. (1987).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he Impact of Participation in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on Non-institu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Han, Sang-Il & Cho, Inyoung

This study empirically tests the argument that participation in social economy will positively contribute to non-institu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By providing a more detailed conceptualization of social economy, we try to explain the mechanism in which social economy influences various typ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particular, by focusing on the fact that social economy is more closely related with non-institu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such as petition, protest, and online-based community activities than institu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such as voting, we clarify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social economy participation and non-institu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By analyzing survey data of 1,900 local residents in Korea, the empirical result confirms that there is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participation in social economy and non-institu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These results add to the existing literature suggesting that social economy provides the possibility of contributing to preventing the decline of participatory democracy.

[Key Words: Social economy, non-institu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participatory democracy]